

국제법<필수>

2021년도 국가공무원 5급[행정]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

응시번호 :

성명 :

제 1 문. B 국 국적자인 甲은 2008년 A 국의 한 초등학교 영어 원어민 교사로 해당 학교와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. A 국 정부는 외국인 원어민 교사에게 계약 시마다 HIV/AIDS 및 마약 검사 결과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,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자국민이나 재외동포에게는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. 甲은 계약 갱신 시 검사 결과 제출을 거부하였고 재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. 甲은 검사 결과 제출 요구가 차별이라는 이유로 A 국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. 그러나 외국인 원어민 교사와 관련한 과거 유사 사안에 대한 소송 결과가 부정적이었으므로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없어, 甲은 바로 자신이 입은 피해사실을 UN 인권위원회(Human Rights Committee)에 통보하였다. 동 위원회는 이 사건을 시민적·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(이하 '자유권규약')과 세계인권선언 위반이라는 견해를 채택하였다.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. (A 국과 B 국 모두 자유권규약 및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 당사국이다)

(총 20점)

- 1) A 국은 UN 인권위원회가 채택한 위 견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. A 국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고, 그 타당성을 국제법에 따라 검토하시오. (10점)
- 2) A 국은 세계인권선언이 선언적 효과만 있을 뿐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국제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. A 국의 주장에 대해 그 타당성을 국제법에 따라 검토하시오. (10점)

제 2 문. 아타카 지역에 위치한 A 국과 B 국은 국경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던 중, A 국 국경수비대가 B 국 국경수비대를 향해 소총을 발사하자, B 국 정부는 이를 자국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규정하였다. 이후 B 국은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하여 A 국 영토 내로 100여 km 진격한 후 A 국 국경지역을 점령하였다. 아타카 지역의 C 국은 B 국의 군사 조치에 강력히 항의하며 B 국 군대가 A 국 영토로부터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다. B 국 정부는 C 국의 항의 및 요구에 대해 이는 A 국과 B 국간의 문제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며 강력히 비난하였다.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. (총 40점)

- 1) B 국이 취한 군사 조치가 UN헌장상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. (20점)
- 2) B 국의 행위에 대한 C 국의 조치를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규정 초안을 토대로 검토하시오. (20점)

제 3 문.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 (총 40점)

(가) A 국과 B 국은 국경을 접하고 있다. A 국의 가르타 지역은 B 국과 근접한 국경지역에 있다. 가르타 지역의 주민 대다수는 B 국의 다수를 차지하는 주민과 종교 및 역사적 전통을 공유하고 있기에 B 국에 편입되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. 이러한 가르타 지역 주민들이 A 국 중앙정부에 대항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하자 B 국은 이들의 활동을 지지하였다. A 국은 가르타 지역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게 되자, 그 배후에는 B 국이 있으며, B 국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A 국 중앙정부에 무장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가르타 지역 분리주의자들이 A 국에 우호적인 주민을 조직적으로 학대 및 추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.

(나) A 국과 B 국간에는 1970년에 ‘양국간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를 위한 협정’(이하 ‘1970년 협정’)을 체결하였다. 이 협정에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.

(다) A 국은 1970년 협정을 근거로 A 국에 우호적인 가르타 주민에 대한 학대 및 추방을 지원하는 B 국의 행위를 금지하는 잠정조치 명령을 내려줄 것을 국제사법재판소(ICJ)에 신청하였다.

(라) A 국은 B 국을 상대로 1970년 협정의 위반을 이유로 ICJ에 소송을 제기하였다. 이에 B 국은 ICJ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항변하였다. B 국의 이러한 항변에 따르면, A 국이 주장하는 바는 무력사용금지 의무 위반, 국내문제 불간섭 의무 위반, 국제인도법 위반 여부일 뿐이며, 인종차별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. 아울러, B 국은 A 국이 제소하기 전에 양국 사이에 어떠한 교섭도 없었으므로, A 국이 근거로 삼는 1970년 협정 제16조를 원용할 수 없기에 ICJ의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항변하였다.

(마) 1970년 협정 제1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.

“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우선 양국 간 교섭에 의하여 해결한다. 단 6개월 이내에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ICJ에 해당 분쟁을 회부한다.”

- 1) A 국의 신청에 대해 ICJ가 잠정조치 명령을 내릴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시오. (20점)
- 2) ICJ의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B 국의 항변에 대해 ICJ가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시오. (20점)

인사혁신처 시험출제과장